

한국인의 '서민' 인식과 친서민정책의 과제

- 전국을 대표하는 20~69세 연령층 1,100명을 대상으로 「친서민정책 인식 및 욕구조사」를 실시(전문조사원에 의한 전화조사, 2010. 8. 16~27)

- 한국인의 '서민'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었으며, 특히 '저소득층을 포함한 중간소득 아래계층'이라 정의함. 전체 응답자의 85.9%가 자신이 서민이라 응답함

- 서민들은 가계살림(생계비) 부담과 자녀보육·교육비 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현재의 친서민정책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아 정책의 내실화 노력이 필요함

1. '서민'의 주관적 개념

□ '서민'의 기준은 소득(92.8%)과 재산(89.6%)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응답자의 58.6%는 직업지위를, 40.9%는 교육수준을 제시하였음

○이러한 경향은 성 및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1] 한국인의 '서민'에 대한 주관적 기준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	재산	소득	직업지위	교육수준
전체	(1,100)	89.6	92.8	58.6	40.9
성					
남성	(558)	89.1	92.8	57.3	39.6
여성	(542)	90.2	92.8	60.0	42.3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633)	89.9	92.6	59.4	42.5
대학(교) 이상	(461)	89.2	93.3	57.5	38.6

□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민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중간소득(50%) 아래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5%로 가장 높았음

○그 외의 의견으로, 서민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합한 개념' 19.5%, '저소득층' 17.4%, '저소득층 위 계층~중산층 아래 계층' 16.5% 등이 있었음

[표 2] 소득을 기준으로 한 '서민'의 정의에 대한 주관적 견해

(단위: %, 명)

구분	저소득층	저소득층을 포함한 중간소득(50%) 아래계층	저소득층 위 계층~ 중산층 아래 계층	저소득층과 중산 층을 합한 개념	계(수)
전체	17.4	46.5	16.5	19.5	100.0(1,100)
성					
남성	19.7	46.1	15.9	18.3	100.0(558)
여성	14.9	47.0	17.2	20.8	100.0(542)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21.0	48.0	14.8	16.1	100.0(633)
대학(교) 이상	12.1	44.3	19.1	24.5	100.0(461)

2. 한국인의 주관적 ‘서민’ 인식비율 및 이유

□ 전체 응답자의 85.9%가 자신이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서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2.1%에 불과하였음

○ 스스로 서민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소득이 낮아서’가 8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재산이 적어서’ 83.1%이었음

· 그 외 ‘직위가 낮아서’ 또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서’라는 비율은 각각 37.7%, 29.1%로 소득 및 재산에 비해 서민의 판단기준으로 약함을 보였음

□ 서민 귀속의식(85.9%)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3] 응답자 본인을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및 그 이유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	서민이라고 생각함	이유 ¹⁾			
			재산이 적어서	소득이 낮아서	직위가 낮아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서
전체	(1,100)	85.9	83.1	88.5	37.7	29.1
성						
남성	(558)	85.3	81.5	90.1	37.0	27.1
여성	(542)	86.5	84.6	86.8	38.4	31.1
연령						
29세 이하	(219)	86.3	77.2	84.1	35.1	17.5
30~39세	(260)	90.0	82.9	85.0	32.5	20.9
40~49세	(272)	84.6	86.5	88.7	36.5	33.0
50세 이상	(349)	83.7	84.2	93.8	44.2	40.1
혼인상태						
유배우	(756)	84.8	83.9	89.1	38.4	31.4
미혼	(295)	88.1	78.8	85.4	34.6	20.4
이혼·별거·사별	(49)	89.8	95.5	97.7	45.5	47.7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633)	87.4	83.7	90.4	41.4	36.9
대학(교) 이상	(461)	83.9	82.2	85.5	32.3	17.8
취업						
취업	(593)	84.7	83.7	87.5	38.0	30.1
비취업	(507)	87.4	82.4	89.6	37.2	28.0
소득수준²⁾						
저소득층	(203)	84.5	88.2	94.7	40.6	38.5
비저소득층	(896)	92.1	81.8	86.9	36.9	26.7
거주지역						
대도시	(510)	86.7	83.9	88.7	37.1	27.4
중·소도시	(455)	83.7	81.9	89.0	35.2	27.8
농어촌지역	(135)	90.4	83.6	86.1	47.5	39.3

주: 1) 중복응답 분석결과이며, 주관적 판단에 의한 서민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비서민'과 '모르겠다'고 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함

2) 가구원 수, 가구소득, 2010년 최저생계비에 의해 육구소득비를 산출하여,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소득 120%이하는 저소득층으로, 그 상위계층은 비저소득층으로 분류함

○본인이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연령이 젊을수록, 배우자가 없을 경우,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비취업자일수록, 비저소득층일수록, 농어촌지역 거주자일수록 높았음
 · 30대 90.0%, 유배우자 84.8%, 고졸 이하 87.4%, 비취업자 87.4%, 비저소득층 92.1%, 농어촌 지역 거주자 90.4%

□ '서민'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12.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여성(11.1%)보다는 남성(13.1%), 50대 이상 연령층(15.8%), 유배우자(13.9%), 대학 이상 학력소지자(14.1), 취업자(13.2%), 저소득층(13.5%), 중소도시 거주자(13.6%)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4] 응답자 본인을 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비율 및 그 이유

(단위: 명, %)

구분	(분석대상)	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이유 ¹⁾			
			소득이 높아서	직위가 높아서	재산이 많아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전체	(1,100)	12.1	72.2	27.8	64.7	33.8
성						
남성	(558)	13.1	80.8	30.1	68.5	35.6
여성	(542)	11.1	61.7	25.0	60.0	31.7
연령						
29세 이하	(219)	8.7	63.2	21.1	73.7	36.8
30~39세	(260)	8.1	71.4	38.1	52.4	38.1
40~49세	(272)	14.0	78.9	31.6	65.8	34.2
50세 이상	(349)	15.8	70.9	23.6	65.5	30.9
혼인상태						
유배우	(756)	13.9	74.3	27.6	62.9	34.3
미혼	(295)	10.2	65.2	30.4	65.2	39.1
이혼·별거·사별	(49)	7.8	60.0	20.0	100.0	-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633)	10.6	67.2	22.4	64.2	26.9
대학(교) 이상	(461)	14.1	78.5	33.8	64.6	41.5
취업						
취업	(593)	13.2	74.4	26.9	62.8	26.9
비취업	(507)	10.8	69.1	29.1	67.3	43.6
소득수준 ²⁾						
저소득층	(203)	13.5	75.0	33.3	58.3	25.0
비저소득층	(896)	5.9	71.9	27.3	65.3	34.7
거주지역						
대도시	(510)	12.0	82.0	32.8	65.6	44.3
중·소도시	(455)	13.6	64.5	22.6	64.5	25.8
농어촌지역	(135)	7.4	60.0	30.0	60.0	20.0

주: 1) 중복응답 분석결과이며, 주관적 판단에 의한 비서민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서민' 과 '모르겠다' 고 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함

2) 가구원 수, 가구소득, 2010년 최저생계비에 의해 육구소득비를 산출하여,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소득 120%이하는 저소득층으로, 그 상위계층은 비저소득층으로 분류함

3. 서민의 생활고 및 친서민정책 이용실태

- 현재 우리나라 서민들의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가계살림(생계비) 부담’ (55.2%) 과 ‘자녀보육·교육비 부담’ (51.6%)인 것으로 나타났음
 - 그 외에도 서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는 ‘주택마련대출 등 주거비 부담’ (47.2%), ‘고용불안정’ (40.5%), ‘보건의료비 부담’ (39.9%), ‘구직문제’ (37.6%) 등이 있었음
- 비서민의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자녀보육·교육비 부담’ (33.8%)과 ‘가계살림(생계비) 부담’ (32.3%) 등이었음
 - 이 외, 서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비서민들도 역시 ‘보건의료비 부담’ (28.6%), ‘주택마련대출 등 주거비 부담’ (26.3%), ‘구직문제’ (24.8%), ‘고용불안정’ (24.1%) 등을 경험하고 있었음

[표 5] 서민 귀속의식 여부별 어려움 경험 비율

(단위: %, 명)

구분	주관적 판단에 의한 서민	주관적 판단에 의한 비서민	전체
(분석대상)	(945)	(133)	(1,100)
가계살림(생계비) 부담	55.2	32.3	52.1
보건의료비 부담	39.9	28.6	38.3
자녀보육·교육비 부담	51.6	33.8	49.5
주택마련대출 등 주거비 부담	47.2	26.3	44.7
고용불안정	40.5	24.1	38.6
구직문제	37.6	24.8	35.9

주: 1) 중복응답 분석 결과이며, 주관적 판단에 의한 서민 귀속의식이 ‘모르겠다’ 고 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함

2) 가구월 수, 가구소득, 2010년 최저생계비에 의해 육구소득비를 산출하여,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소득 120%이하는 저소득층으로, 그 상위계층은 비저소득층으로 분류함

-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정책의 이용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을 제외하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
 - 가장 이용경험이 높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은 서민의 20.5%, 비서민의 13.5%가 이용하고 있었음
 - 두번째로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서민정책은 육아지원대책인 ‘보육료 지원 및 아동돌보미 서비스’ 로서 서민의 9.0%, 비서민의 2.3%이었음
 - 이 외에도 서민들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3.7%), ‘서민대출상품’ (3.4%), ‘보금자리주택공급’ (2.4%),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2.3%) 등을 이용하고 있었음

- 현재의 서민정책을 이용한 서민들의 정책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은 ‘긴급생계지원’ (46.2%), ‘보육료 지원 및 아동돌보미 서비스’ (42.4%), ‘대학생 학자금 대출’ (41.8%) 등이었음
 -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는 10%대의 낮은 만족률을 보였음
- 현 서민정책에 대한 불만족도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가 4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서민대출상품’ 으로 43.8%이었음
 - 이 외에도 만족도보다 불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는 ‘건강취약계층 지원’ 과 ‘보금자리주택공급’ 이었음

[표 6] 정부의 서민정책에 대한 서민의 이용 경험률 및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서민정책 이용경험률 ¹⁾		만족도 ²⁾			
	(분석대상)	비율	불만족함	보통	만족함	계(수)
보금자리주택공급	(945)	2.4	30.4	47.8	21.7	100.0(23)
대학생 학자금 대출	(945)	20.5	24.7	33.5	41.8	100.0(194)
긴급생계지원	(945)	1.4	15.4	38.5	46.2	100.0(13)
서민대출상품	(945)	3.4	43.8	31.3	25.0	100.0(32)
저소득층 자립지원	(945)	1.3	33.3	33.3	33.3	100.0(1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945)	2.3	13.6	72.7	13.6	100.0(22)
사회적 기업 활성화	(945)	1.2	45.5	36.4	18.2	100.0(11)
희망근로 프로젝트	(945)	3.7	28.6	37.1	34.3	100.0(35)
건강취약계층 지원	(945)	1.2	36.4	36.4	27.3	100.0(11)
보육료 지원 및 아동돌보미 서비스	(945)	9.0	16.5	41.2	42.4	100.0(85)

주: 1) 주관적 판단에 의한 서민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현 정부의 서민정책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4. 서민의 정책욕구

- 우리나라 서민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18.6%)이라고 하였음
 -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지원’ (14.3%), ‘보육료 지원 및 아동돌보미 서비스’ (13.8%), ‘건강취약계층 지원’ (11.1%) 등이었음
- 정부의 현 친서민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은 대부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이라고 응답하였음
 - 그렇지만 30대 연령층은 ‘보육료 지원 및 아동돌보미 서비스’ 를, 저소득층은 ‘긴급생계지원’ 을, 농어촌지역 거주자는 ‘저소득층 자립지원’ 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였음

[표 7] 정부의 친서민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¹⁾

(단위: %, 명)

구분	보금자리 주택 공급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긴급 생계 지원	서민 대출 상품	저소득층 자립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활성화	희망근로 프로젝트	건강취약계층 지원	보육료 지원 및 아동돌봄 서비스	계(수)
전체	9.7	7.3	8.1	9.1	14.3	18.6	5.6	2.3	11.1	13.8	100.0(945)
연령											
29세 이하	9.0	11.1	5.8	11.1	18.0	20.1	5.8	3.2	7.4	8.5	100.0(189)
30~39세	17.1	2.6	6.4	8.1	11.1	14.5	4.7	1.3	7.3	26.9	100.0(234)
40~49세	8.3	9.6	7.0	9.1	13.9	19.6	7.8	1.3	10.4	13.0	100.0(230)
50세 이상	5.5	6.8	12.0	8.6	14.7	20.2	4.5	3.4	17.1	7.2	100.0(292)
혼인상태											
유배우	8.1	6.9	8.1	9.4	13.6	17.2	6.1	2.3	11.5	16.8	100.0(641)
미혼	13.5	8.8	6.5	9.6	16.5	21.9	5.0	2.7	8.5	6.9	100.0(260)
이혼·별거·사별	11.4	4.5	18.2	2.3	11.4	20.5	2.3	-	20.5	9.1	100.0(44)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8.7	9.4	9.6	9.2	14.5	19.0	4.0	2.9	10.8	11.9	100.0(553)
대학(교) 이상	11.4	3.9	5.9	9.0	14.0	18.3	7.8	1.6	11.6	16.5	100.0(387)
취업											
취업	12.4	6.4	6.8	11.2	14.3	17.5	6.4	1.6	10.0	13.5	100.0(502)
비취업	6.8	8.4	9.7	6.8	14.2	19.9	4.7	3.2	12.4	14.0	100.0(443)
소득수준 ²⁾											
저소득층	11.8	10.2	16.6	6.4	12.8	15.0	2.7	2.7	13.9	8.0	100.0(187)
비저소득층	9.2	6.6	6.1	9.8	14.7	19.4	6.3	2.2	10.4	15.2	100.0(757)
거주지역											
대도시	11.1	8.1	6.6	10.4	12.7	17.0	6.3	2.5	11.8	13.6	100.0(442)
중·소도시	8.7	6.6	9.4	8.4	14.7	21.0	4.5	2.6	9.4	14.7	100.0(381)
농어촌지역	8.2	6.6	9.8	6.6	18.9	17.2	6.6	0.8	13.9	11.5	100.0(122)

주: 1) 주관적 판단에 의한 서민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가구원 수, 가구소득, 2010년 최저생계비에 의해 육구소득비를 산출하여,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소득 120%이하는 저소득층으로, 그 상위계층은 비저소득층으로 분류함

서민들은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하여야 할 서민정책으로 ‘물가안정정책’ (32.9%) 과 ‘청년실업해소정책’ (19.7%)을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보육·교육비부담완화정책’ (14.6%), ‘생계지원정책’ (10.6%) 등이 뒤를 이었음

정부가 우선추진 하여야 하는 친서민정책을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연령에 상관없이 ‘물가안정정책’ 을 가장 우선순위로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 우선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친서민정책은 30대 ‘보육·교육비부담완화정책’, 그 외의 연령대(20대, 40대, 50대 이상)는 ‘청년실업해소정책’ 이었음

- 혼인상태에 상관없이 '물가안정정책' 을 가장 우선순위로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 우선추진 친서민정책으로 유배우자와 미혼자는 '청년실업해소정책' 을, 이혼·별거·사별자는 '생계지원정책' 을 제시하였음
-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물가안정정책' 을 가장 우선순위로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 우선추진 친서민정책으로 고등학교 이하 학력자는 '청년실업해소정책' 을, 대학 이상 학력자는 '보육·교육비부담완화정책' 을 들었음
-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물가안정정책' 을 가장 우선순위로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 우선추진 친서민정책은 '청년실업해소정책' 이었음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물가안정정책' 을 가장 우선순위로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 우선추진 친서민정책으로 저소득층은 '생계지원정책' 을, 비저소득층은 '청년실업해소정책' 을 제시하였음
-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물가안정정책' 을 가장 우선순위로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 우선추진 친서민정책으로 대도시 및 중소도시 거주자는 '청년실업해소정책' 을, 농어촌 거주자는 '생계지원정책' 을 제시하였음

[표 8] 정부가 서민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

(단위: %, 명)

구분	생계지원 정책	보건·자 활의로 보 장정책	주거복지 정책	물가안정 정책	청년실업 해소정책	저소득층 자립·자 활 지원	보육·자 활교육비 부담완화 정책	기타	계(수)
전체	10.6	6.9	7.0	32.9	19.7	7.1	14.6	1.3	100.0(945)
연령									
29세 이하	7.4	5.3	3.7	36.5	28.6	5.8	12.7	-	100.0(189)
30~39세	10.3	6.0	11.1	32.1	9.4	5.6	25.2	0.4	100.0(234)
40~49세	9.1	6.1	7.4	31.7	20.0	7.4	17.0	1.3	100.0(230)
50세 이상	14.0	9.2	5.5	32.2	21.9	8.9	5.5	2.7	100.0(292)
혼인상태									
유배우	10.5	6.7	6.9	31.4	17.9	7.3	17.5	1.9	100.0(641)
미혼	8.8	6.5	7.3	37.7	23.8	6.5	9.2	-	100.0(260)
이혼·별거·사별	22.7	11.4	6.8	27.3	20.5	6.8	4.5	-	100.0(44)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12.3	6.9	5.6	33.6	20.8	8.1	11.8	0.9	100.0(553)
대학(교) 이상	8.0	7.0	9.0	31.5	18.3	5.7	18.9	1.6	100.0(387)
취업									
취업	10.0	6.2	10.2	34.7	16.9	7.4	13.1	1.6	100.0(502)
비취업	11.3	7.7	3.4	30.9	22.8	6.8	16.3	0.9	100.0(443)
소득수준 ²⁾									
저소득층	25.7	10.7	3.7	29.9	13.9	9.6	5.9	0.5	100.0(187)
비저소득층	6.9	5.9	7.7	33.7	21.1	6.5	16.8	1.5	100.0(757)
거주지역									
대도시	8.6	7.9	7.0	34.4	21.0	7.0	13.1	0.9	100.0(442)
중·소도시	10.8	6.0	6.6	32.5	19.2	5.8	17.6	1.6	100.0(381)
농어촌지역	17.2	5.7	8.2	28.7	16.4	11.5	10.7	1.6	100.0(122)

주: 1) 주관적 판단에 의한 서민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가구원 수, 가구소득, 2010년 최저생계비에 의해 욕구소득비를 산출하여,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소득 120%이하는 저소득층으로, 그 상위계층은 비저소득층으로 분류함

5. 친서민 정책의 주요 정책방향 및 과제

- 친서민정책이란 서민대상 정책이라기 보다는 서민을 위한 정책(Policies for Ordinary People), 서민친화적 정책(Ordinary People Friendly Policies)을 의미하며, 목표(Objectives)는 사회통합과 생활안정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서민들의 삶의 수준이 제고되어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는 것임
 - 따라서 정책대상은 저소득층에만 초점을 두어서도 안 되고, 중간소득 이상 계층에 무게가 너무 실려서도 안 될 것이며, 친서민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필요성을 토대로 정책방향 및 과제가 고려되어야 함
- 친서민정책은 우선 사전적인 측면에서 교육, 근로, 주거환경, 금융지원 등에서 기회 균등의 정책, 공정 경쟁 속에서 희망과 재기가 가능한 자활 · 경제 자립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사후적인 측면에서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소득 재분배의 정책, 그리고 사회적 기여에 참여할 수 있는 나눔 문화의 정책 등의 과제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정책에 대한 ‘정책 접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시급하게 추진하여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함
 - 본 실태조사결과, 이용률이 낮은 ‘긴급생계지원’,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회적기업’, ‘건강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정책효과를 제고해야 할 것이며, 특히, 불만족도가 만족도보다 높은 ‘사회적 기업 활성화’, ‘서민대출상품’, ‘건강취약계층 지원’, ‘보금자리주택공급’ 등에 대한 불만족 해소가 시급함
 - 아울러 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는 높지 않으면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자립지원’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더욱더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긴급생계지원’, ‘보육료 지원 및 아동돌보미 서비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함
- 마지막으로 정부의 친서민정책은 정책대상보다는 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중점을 두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 무엇보다도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으로써 서민의 ‘생활안정’과 ‘희망찬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공공요금 인상, 생필품 가격상승 등 물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관련 정책을 조정하여야 하며, 청년실업 해소,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고용증대를 통한 서민생활안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김승권 (복지서비스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문의 (02-380-8212)

이태진 (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 문의 (02-380-811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